

독일의 경험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일시 : 2013년 8월 30일 ~ 31일

장소 : 경주 교원드림센터



Konrad
Adenauer
Stiftung



여명학교
Yeomyung School

■ 일정

	8월 30일		8월 31일	
08:00~09:00	출발		아침식사 및 휴식	식당
09:00~10:00				
10:00~11:00			■ 강연 2 - 아리토모 슌 북한 사회의 어려움과 북한교육 이수자로서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	소강의실 드림 아카데미 1층
11:00~12:00				
12:00~13:00				
			폐회식 및 기념촬영	
13:00~14:00	도착 및 점심식사		점심식사 및 출발	
14:00~15:00	개회사	소강의실 드림 아카데미 1층		
15:00~16:00	■ 강연 1 - 크리스토프 코넬리 session 1 독일 통일을 통한 사회 전환 및 사회 변화			
	session 2 독일 통일 이후 “신 연방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이 실시한 민주시민교육의 실 태와 문제점			
16:00~17:00	session 3 젊은 성인을 대상으 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의 구성, 교수법 그리고 형식			
17:00~18:00	■ 토론 1 -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 크리스토프 코넬리 동서 화합기의 경험			
18:00~19:00				
19:00~20:00	저녁 식사	라테라스		

■ 순서

독일 통일을 통한 사회 전환 및 사회 변화 - 크리스토프 코넬리

Session 1

독일통일을 통한 사회전환 및 사회변화	1
----------------------	---

Session 2

독일 통일 이후 “신 연방주”에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실시한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5
--	---

Session 3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교수법 그리고 형식	9
---	---

질문지	17
-----	----

민주시민교육 시선으로 본 북주민 및 북한사회의 전환적 문제점들 - 아리토모 순	19
---	----

질문지	33
-----	----

독일 통일을 통한 사회 전환 및 사회 변화

강사 크리스토프 코넬리 Christoph Korneli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재단 베를린 아카데미 교육센터

■ 강사 이력

1954년 1월 9일 드레스덴 출생

천주교, 기혼, 자녀 3명, 8남매 중 막내로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

1960-1970 드레스덴 종합기술 고등학교

1970-1973 대학입학자격(기계공학)을 획득한 직업교육 과정 이수, 정치적 이유로 “심화 고등학교 (현 고등학교)” 진학 불가

1973-1975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 복무

1975-1976 교텐(안할트 주) 기계공학대학 화학공학과 / 학업 중단

1976-1978 민족박물관 근무 (민족주의 박물관), 라이프치히

1978-1983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민족학 (사학, 독일 민족학 / 문화사, 윤리학), 민족학 졸업

1983-1987 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에르푸르트 민족박물관, 바이마르 호헨펠덴 야외 박물관), 베를린 “시장 박물관” 박물관 교육부 부장

1987 동독 탈출 서독 이주 (5년 기한의 친지방문 비자 반복 신청)

1987-1992 박물관(프랑크푸르트, 코블렌츠, 마인츠), 연맹, 정치재단 등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및 여행가이드 등 여러 활동

1993년부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정치교육 부서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1994 기민당 입당

1994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교육위원으로 입사, 1996년부터 튀링겐 지역 사무소 연구원으로 근무

2002-2005 포츠담에 사무소가 있는 브란덴부르크주 지역사무소 소장

2006-2009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르헨티나 사무소 소장, 부에노스 아이레스

2010년부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베를린 아카데미 교육센터 정치교육 강사

Session 1

독일통일을 통한 사회전환 및 사회변화

(본 원고는 요약문으로 발표 중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보충할 예정.)

어느 누구도 독일의 분단 상태가, 그리고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독의 운명이 이렇게 빨리 종결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폭력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뤄졌던 국가체제의 파열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통일 방법으로 독일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평화로운 통일을 기적으로 여긴다! 필자는 동독의 국가체제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끝나는 날을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약 2년 전에 동독을 이탈하였다.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에는 정치, 사회, 경제, 즉 모든 사회 영역이 급변하였고,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독일의 상황에 대응하려고 독일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두가 함께 통일을 이뤄내려는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의지는 동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진 자유 인민의회 선거에서 동독-기민당, 독일 사회주의연맹(Deutsche Soziale Union), 민주적 출발(Demokratischer Aufbruch)로 구성된 기독교보수적인 "독일연맹(Allianz für Deutschland)"이 승리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그 후 1990년 6월 화폐통합이 있었고, 10월 3일에는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였다. 당시 독일의 정치적 역사적 사건들에 관해서는 다양한 문헌에서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상의 이유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다.

본 발표의 핵심 주제는 독일 변혁기가 독일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독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되돌릴 수 없는 변혁과정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특히 사회 전체에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어느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 버렸고, 또 어느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 그리고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서서히 바뀌었다. 그러나 변혁과정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겨운 것이었다. 통일로 인해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익숙했던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했다. 변혁과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큰 과제와 문제들을 안겨주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부에 참여하려 독일 마르크 화폐와 통합되기를 원했지만, 원한 만큼 시장경제라는 원리와도 대면해야 했다. 동독 사람들은 정치로부터 바라는 것도 매우 컸지만, 경험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민주주의, 자결권, 법치주의로부터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것이었다. 유명한 예술가이자 반체제 운동가였던 바르벨 볼라이(Bärbel Bohley)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우리는 정의를 기대했으나 법치주의를 얻었다."

처음에 일었던 열광적인 분위기는 곧 가라앉았다. 특히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동독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앙집권적으로 결정되었던 계획경제는 민영화되었고, 계획경제체제 안에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다.

국민경제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 또는 어쩔 수 없이 변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델이나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 소유의 동독 경제"를 민영화하기 위해 "신탁관리청"이 설치되었다. 잘못된 예측과 함께 극변화하는 당시의 상황은 주민들의 직업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불안과 좌절을 고조시켰다. 오늘날에는 당시 40-60세였던 사람들이 "부러진 인생"을 살았다고도 표현한다. 기존 국가체제에서 이룩한 성과와 커리어가 새로운 체제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집단해고 되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동독 주민들은 "통일"의 열정을 옛 체제에 대한 향수로 대체하였다. 자기 책임이 강요되지 않았던 옛 국가체제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동독 시절의 옛 가치들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서독의 가치들에는 익숙해지지 못했다. 동독과 동독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서독 주민들과 같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동독의 공산당(사회주의통일당, SED)은 아무런 제제 없이 표면적으로만 민주주의적인 민주사회당(PDS)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새로 창당된 민주사회당에는 옛 동독 정권 책임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함과 불편함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에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사회가 신속히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통일과정에 대해 실망한, 소위 "패배자" 그룹도 생겨났다.

패배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열등감을 느꼈고, 그래서 경쟁과 성과 위주의 새로운 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독의 상황을 미화시키거나(연대, 안전, 평등), 이러한 감정을 극우주의로 발전시켰다. 열등감은 외국인 혐오증으로 표출되었다. "패배자"들도 동독 지역에 새로 구축된 연대주의 사회보장체제 안에서 사회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이 점은 간과되거나 또는 도움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로 인한 안도감이나 고마움을 느끼는 대신 사회로부터 비현실적인 것들만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동독 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체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론적으로 평등했던 동독의 옛 사회와는 달리 새로 형성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패배자 그룹도 형성되기 마련이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 하에 행동할 수 없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인생의 목표는 독재, 부족함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경쟁을 해야 하는 성과사회가 형성되었다. 동독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된 사회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에는 말하자면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는 두 개의 "기차"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수준을 외형적으로 동등하게 맞추는 기차였고, 다른 하나는 사회심리학적인 통합을 이루는 기차였다. 변혁과정의 다양한 경험들을 한 동독 주민들은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새로운 사회에 훨씬 쉽게 적응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하여 개방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갖고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였다. 다만 "패배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기 힘들어 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은 실업률이 높았던 곳들이었다.

경쟁력이 있었던 젊은이들은 동독지역을 떠나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새로운 직장을 서독 또는 다른 국가에서 찾았다. 그러나 남은 젊은이들은 절망했고, 결국 극우 또는 극좌주의자가 되었다.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 있던 지역에서는 네오나치주의, 외국인 혐오증, 편협 애국주의가 증가하였다.

오늘날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독일의 분단은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 동독의 과거와 자신은 개인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없고, 동독과는 어떠한 연관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독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물론 라이프치히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쾰른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는 당연히 다른 고유의 지역적인 특성을 지녔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다. 독일은 어쩌면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더 풍부한 사회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 지역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독일 전체를 바꿔 놓았다. 독일의 변화과정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 그리고 필자가 속한 세대의 대부분에게는 독일의 분단이 큰 아픔을 남긴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독일 통일이란 역사적인 기회가 인생의 큰 행운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은 통일을 이룩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독일 통일을 더욱 정착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

Session 2

독일 통일 이후 “신 연방주” 에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실시한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본 원고는 요약문으로 발표 중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보충할 예정.)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부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민주시민교육 담당부서는 제한된 선에서나마 서독의 참가자들을 데리고 정치적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독을 방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 정권의 책임자들은 동독주민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금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감시를 받았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재단은 이후 동독이 존립한 1990년 10월 3일까지 동독지역에 정치적, 지역적, 학술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확대해 나갔다. 이 기간 동안 훗날 전국적인 활동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신연방주에 체계적으로 사무실을 설립하기도 전에 재단은 경험이 풍부한 실무단을 동독에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동독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계와 행정부처의 핵심인물들을 파악하였으며 통일 이후 동독이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그간의 풍부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전무후무한 속도로 급변하는 사회변혁에 대응해야만 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민주시민교육 사무소가 설립되던 이 기간 동안 교육의 핵심은 동독의 각 행정부처, 정계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상담이었다. 당시 교육 대상자는 경찰 및 교사였다. 새로 선출되거나 지명된 연방주 의원 또는 지역 정치인들은 장벽이 붕괴되기 이전에 실질적인 정치경험이 전무했다. 이들은 대체로 사회주의체제에서 개인적인 공간이나 자유사상가들의 모임 등과 같은 작은 틈새에 속하던 사람들로 통일 이후 용기를 갖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일상 직장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 강좌 등은 사람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 밖에도 구동독의 국가보안부와 국가보안부가 야기한 결과, 또 그 희생자들을 위한 관리와 도움의 손길 역시 매우 중요한 활동 과제였으며 교육 주제를 구성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교사와 경찰은 통일 이후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된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과는 전혀 상반되는 인간상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보아야만 했다. 따라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교사가 매일 매일의 수업과 업무에 곧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했다. 교육 방식과 내용을 이에 알맞게 조정하고 준비하는 작업은 또 다른 도전이자 과제이기도 했다. 공권력을 행사해야 했던 경찰을 위한 교육 강좌에서는 법치국가의 개념이나 일상생활 또는 갈등상황에서의 시민 응대법과 같은 내용 등이 교육의 핵심을 이루었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독 주민들에게 내용면에서 생소한 것이었으며 종종 자신들을 세뇌시키고 주입시키려는 일종의 선동이나 선전과 동일시되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선전과 같은 장치들은 너무나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며 당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연히 민주시민교육을 미심쩍어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람들의 이러한 선입견은 매우 느린 속도로 서서히 바뀌었다. 그러나 첫 세미나 참석 이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지켜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물론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만 했다.

1992년부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또 한 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점점 더 심도 있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었으며 특정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통일에 대한 감동이 어느 정도 사그라지자 사람들은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의 토대가 되는 기독교적 인간상의 ‘자유와 책임’, ‘유럽의 통합과정’, ‘독일의 국내 통합’, ‘국제 정치 및 현대사’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 초기에는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의 주요한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자유, 자기책임, 정의, 연대의식 등과 같은 개념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목표였다. 물론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통일이 가져온 변화와 그 여파에 사람들은 불평등하고 무가치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으며 이처럼 잠재된 열등감에 오히려 더욱 강하게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구동독에 대한 막연한 향수심을 도피처로 삼아 위안을 얻었다. 어떻게 보면 그 때까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과 경험을 해 온 동독 주민들이 이처럼 새롭고 중요한 가치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작업들이 전제되어야만, 한 사회를 받쳐주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은 “전지전능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다른 영역들과 함께 사회에 부분적으로만 작용할 뿐이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먼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해쳐나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법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주제는 구동독 집권당과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던 신봉자들에 의해 곧 바로 거론되어졌다. 그들의 주장은 동독주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왔다. 동독인들이 전체주의 국가체제를 평화적인 혁명으로 직접 쓸어버리기는 했어도 “서독의 정치”가 언제나 주민들의 입장과 같지는 않았던 탓이다. 민주정당으로 탈바꿈한 구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스스로를 소외된 계층으로 구분짓도록 만들었다. 그 외에도 이전의 정권 관련자나 독재정권을 강제로 따랐던 비정치적 성향의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합류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었나?

이렇듯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던 경쟁자들 속에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신연방주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중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 청소년의 참여로 이루어진 청소년프로그램이었다. 그 밖에도 역사적 사실과 구동독체제에 희생자였던 시대적 증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 구동독의 역사와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나갔다. 특히 이러한 교육에서 다루었던 소주제 등은 시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주변 환경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경험들과도 연계되어 지역정치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고 스스로의 의견과 권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학 및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등의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다. 그 중 특정 주제를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과 접목시킨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 외에 극단주의, 외국인혐오주의, 신나치주의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대도시 센터 등에서는 곧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고 행사의 참가자수가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들이 가시화 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교육활동은 여전히 중시되면서도, 더디게만 진행 되었다.

장년층 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는 통일과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간접 경험하였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유연성을 장려하고, 변화된 사회 속에서 성장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것에 교육의 주안점을 두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독일 내의 네트워크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독일 내에서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총체적인 커리큘럼

의 교육 강좌 등을 실시하였다.

동독과 서독을 지속적으 가까이지게 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만남주선형 세미나들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에르푸르트/튀링겐 사무소의 경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3회에 걸쳐 일주일간의 세미나를 다른 도시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동독의 청소년들은 서독의 청소년들과 일주일을 함께 하며 독일 독재정권의 역사, 분단독일의 역사와 통일과정 등을 배우고 논의하였다. 수학여행, 정치인 또는 사회 유명인사와의 대화 등이 프로그램에 더해졌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룹을 섞게 하여 참가자들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였다.

통일 후 수년에 걸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같은 정당재단의 민주시민교육은 신연방주에서 자리를 잡아갔으며 프로그램의 주제나 형태 등은 각각의 상황과 수요에 맞게 조정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교육은 만남의 자리(독일-폴란드 포함), 다양한 교내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젝트, 전시회 및 이벤트, 지역 행사, 작가 낭독회, 지역 코칭, 대학강좌, 공개 정치 포럼 및 토론회 등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Session 3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교수법 그리고 형식

(본 원고는 요약문으로 발표 중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보충할 예정.)

독일국민의 민주시민교육은 독일연방공화국 건립 이래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차원의 과제이다. 초창기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나치주의의 끔찍한 결과와 “바이마르 공화국”의 약했던 민주주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민주시민적 사고를 굳히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국가차원의 초정당적인 기구들이 설립되었는데 “연방정치교육센터”와 각 연방주의 지역별 “주정치교육센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와 별도로 대정당에서는 정당의 세계정치관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에 정당별로 다양한 기관들이 설립되었으며 이 기관들은 정당의 재정(과 공공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었다. 그 당시 정당 입장에서는 차세대 정치인의 육성이 중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시민교육형태는 점차적으로 정당의 국가재정지원이라는 부분과 갈등을 빚게 된다.

그 결과 현존하는 국가차원의 교육기구 외에 “정치재단” 또는 “정당재단”이라고도 불리는 시스템이 남아 오늘날까지도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단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로 특정 과제를 담당하며 대부분 연방정부의 재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담당하는 분야에 따라 해당 국가부처나 산하 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정치재단은 인적, 재정적으로 각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한편, 독일 정치와 사회의 민주주의적이고도 다원적인 모습을 대변한다.

이 밖에도 공공교육제도를 통해 각 연방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을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다른 과목과 복합적으로 학교 수업 중에 다루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수업방식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수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각 교사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타 다양한 프로젝트, 단체 그리고 네트워크 등이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을 다루거나 특정 분야의 주제를 국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민주주의발전을 위해 이 단면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는 데에 동참하고 있으며 독일 기독교적 민주주의 안에서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입지와 뿌리를 갖고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재단 내에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주시민교육 중앙부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의 활동이 전통적인 “핵심 사업”이 된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재단사업의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사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재단은 다음 세대가 성장하면서 그들이 속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화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면서 재단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젊은이들이 민주시민적 사고를 하는 성숙한 국민, 비판적이고 건설적으로 자기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국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의 구성과 교수법 역시 높은 수준의 목표에 걸맞게 결정된다. 오늘날 형식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면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식의 교육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다양한 교육방식에 참여하는 젊은 참가자들이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스스로 어떠한 결과를 깨닫고 이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을 가장 우선시 하기를 바란다. 청소년은 스스로가 깨닫고 시험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을 믿는다. 이것은 오래된 것을 새롭게 바꾸고, 전통적인 것을 시대에 걸맞게 고치고,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이러한 모습은 합법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이러한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장려해야만 한다.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시사적인 주제나 미래의 과제 등이 수업 중에 논의 될 뿐만 아니라 특정 경험의 공유, 현대사 분석, 각종 국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 등도 수업 중에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의민주주의가 부분적으로 취약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제정치에 비해 가지는 지속적인 장점들이 무엇인지를 직접 찾아보고 깨달음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이를 학습하고 소화하게 된다.

민주시민교육과 차세대 양성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현대사 및 독일 독재정권의 역사
- 유럽통합과정
- 수사학 및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 미디어 및 언론정책
- 저널리즘 교육

- 민주주의체제의 토대, 국가 건립
- 국제정치 및 국제사회에서의 독일의 역할
- 이주민의 통합
- 인구문제 및 인구문제가 사회체제에 미치는 영향
- 갈등극복
- 명예직 및 정치적 참여

이러한 주제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에서 다루어진다. 교육 컨셉트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학습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미 입증된 방식 외에도 수시로 실험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에 맞게 교육방식을 변화하거나 맞추기도 한다. 이 때 교육을 실제로 진행함에 있어서 민간사회의 정치 단체나 주제와 관련된 파트너와 협력하거나 또는,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며 중요하다. 젊은 책임자나 시대적 증인의 생생한 증언과 같은 경험은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정치적, 역사적 사실이나 시사적인 내용을 단순히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학습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중요한 학습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공개 세미나 또는 특정대상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샵
- 학교수업과 병행된 교내행사 (프로젝트 주간, 작가 낭독회, 영화, 전시회 등)
-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응모대회
- 만남주선형 행사 (국내, 국제), 모의행사(모의 POLIS, 모의 UN 등)
- 수학여행
- 의회방문
- 시대증인과의 대담
- 정치인과의 대화의 시간
- 예술 및 연극 프로젝트
- 사진 및 영상 워크샵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인턴쉽
- 정치적 극단주의에 관한 행사
- 언론교육, 저널리즘 워크샵(학생신문)
- 갈등 매니지먼트
- 수사학 및 커뮤니케이션
- 시간 및 자원 관리

청소년 교육의 다양한 사례

1)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프로젝트 “넥스트 챕터”

대담 형태의 “넥스트 챕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진행 과정이 정해져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라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인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도 한다. 넥스트 챕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집필된다.

독일 각 연방주에는 세 개의 아이디어를 찾는 팀이 있다. 이 아이디어는 “국가와 국민”, “나라와 사람”, “인간과 발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제목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넥스트 챕터는 각 팀에서 위 제목들에 대해 갖는 결정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바로 그 질문에서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각 팀들은 2013년까지 연 4회의 만남을 가진다. 토론결과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정계, 학계 및 사회의 인사들이 참가하는 2013년 여름 아카데미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독일-넥스트 챕터”는 바로 이 곳에서 써진다. 우리는 국민과 정계가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찾고 있다. 넥스트 챕터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독일 전역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추진해나갔다.

독일의 각 연방주는 서로 다르다. 이처럼 각 연방주의 팀 역시도 다르다. 팀원 중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 의사도 있고 사회초년생도 있다. 해양생물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다. 젊은이도 있고 아주 어린 학생들도 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토론에 참여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들을 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브레멘 교육원 프로젝트

한 정당에서 “A 정당을 찍으십시오!”라고 하고, B 정당에서 “B 정당을 뽑으세요!”라고 하는 것만이 선거홍보는 아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브레멘 사무소에서 주최한 “선거홍보”라는 청소년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이 대회에 참가

한 청소년들은 말 그대로의 “선거홍보”를 통해 선거 자체를 홍보하였다. 즉, 2013년 9월 22일에 실시 될 예정인 독일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것을 홍보한 것이다. 대회에 제출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참가작들은 대대적인 시상식을 거쳐 교육원에 전시되었다.

3) 에르푸르트 교육원 프로젝트

대학정책 포럼

대학정책을 주제로 한 일련의 행사들이 계획 된 가운데 5월 27일 일메나우에서 그 첫 행사가 치러졌다. 본 행사에서 정치인, 학술인, 경제인들이 학생들과 함께 대담을 가졌으며 대학교육 및 학술적 경제적 입지로서의 튀링엔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에르푸르트 교육원 프로젝트

2012 민주주의 회의: “정당 2.0 – 커뮤니케이션, 정당 및 디지털 사회”

약 100여 명의 전문가와 학술, 정경, 언론 분야에서 초청된 참가자들을 모시고 2012년 민주주의회의가 예나에서 “정당 2.0 – 커뮤니케이션, 정당 및 디지털 사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본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 외에도 온라인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의 융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최근에 논쟁되었던 ACTA 협약과 함께 자유와 보안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국민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과 참여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리스크 또한 분석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전자정부의 도입과 정당의 온라인 활동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본 행사 참가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이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감소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한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간관계 역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체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자기책임의식이 충분한 민주주의 시민의 경우 인터넷이 유용한 참여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참가자 및 강연자들은,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인터넷 상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 또한 개인이 갖춰야 하는 중요한 자질요건이라고 꼬집었다.

5) 하노버 교육원 프로젝트

안네 프랑크 - 유럽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다.

2013년 6월 베르겐(셀레 지역)에서 안네 프랑크 추모행사의 하나로 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날이 열려 유럽과 니더작센주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2013년 안네 프랑크 추모행사의 끝무리에 베르겐 시청에서 열린 특별 전시회를 둘러본 방문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행사 주간에 진행된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불과 몇 시간만에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대한 12개의 콜라주를 완성했다. 학생들이 가졌던 정치의 날의 모토와 주제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 - 색감을 입다“였다. 이 12개의 콜라주는 참가학생들의 고향인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웨일즈 및 니더작센 주에 순회전시 될 예정이다.

6) 슈투트가르트 교육원 프로젝트

독일연방행복부: 학교 워크숍 및 정치인과의 토론회

어쩌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악몽이라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 여름, 햇살 가득한 금요일 오후에 야외수영장이 아니라 학교에 남아 있으라고 했다면 말이다. 그러나 만하임에 있는 4개 학급 학생들은 기꺼이 이 보충수업에 참여했다. 독일연방행복부에서 이들을 찾아갔으니 그다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아니 뭐라고? 독일연방...무슨..부?

독일연방행복부? 그냥 꿈일 수도 있지만 그다지 비현실적인 것만도 아니라고?

만하임의 학생들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주최한 4개의 워크숍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다루었다. 지나 웰러와 다니엘 클라렌스가 학생들을 도왔다. 지나와 다니엘은 만하임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석사과정에 있으며 제일 먼저 이 행복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인터넷, 학교, 극장 그리고 길거리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며 학생들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를 원했다. 바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정부를 평가할 때 왜 국민총행복지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란 것. 독일연방행복부는 부탄을 모범적인 국가로 본다. 부탄에서는 모든 법안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지 먼저 검토 된다고 한다.

아이디어 코치를 맡은 마틴 그론바흐와 함께 학생들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지위적 상징도, 자동차나 스마트폰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돈도 아니었다. 학생들은 야외활동, 자연, 친구들과의 만남 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행복이라고 답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친구, 가족, 사랑, 유대감, 햇살처럼 본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것들이었다.

학생들은 더 나아가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사회에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

하고, 자신들이 생각해낸 것들을 행사일 끝까지 활발히 토론했다. 만인의 평등, 여성참여율, 포용 등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토론결과가 매우 상반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주제를 도덕적 가치와 연관시켜 논의한 것이다. 학생들은 단순히 즉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묻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더욱 행복한 세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성숙된 국민을 만들고 교육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라고 했다. 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만하임 연방하원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직접 정계 인사들에게 전했다.

7) 베를린 젊은 아카데미의 민주시민교육 방식

교실 앞에서 가르치고 이어서 토론이 이루어졌던 전형적인 주입식 수업방식은 이제 그 역할을 다했다. 베를린 젊은 아카데미는 **색다른 방식의 교육**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청소년문화의 새로운 발전과 트렌드(힙합, 랩, 포이트리 슬램 등)를 고려한다. 기존의 **청소년회의, 청소년 정치의 날**을 비롯한 각종 **워크숍과 전시회** 외에도 베를린 젊은 아카데미는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계획 및 개최한다.

8) 2013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날

“청소년이 움직인다: 미래를 내다보며”

청소년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심없으니 가만 뉘뉘요 세대”가 아니다. 2013년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날을 맞이하여 베를린에서 열렸던 “나한테 중요한 것”이라는 행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 행사에 온 200여명에 달한 참가자들 중 수많은 학생과 장학생들이 가족, 학교교육, 노동시장의 현황, 안전과 정치라는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질문지

소속 :

이름 :

민주시민교육 시선으로 본 북주민 및 북한사회의 전환적 문제점들 - 개별적 경험에 토대하여

강사 아리토모 순
- 브리징 대표

들어가며

1. 북주민은 어떤 “사회정치교육”을 받아 왔을까
2. 개별적전환속에 있는 이탈주민에게 비친 남한사회상 및 남북주민의 초대면
3. 개방/시장경제를 마중하는 북주민에 대한 사회문화적 교육 경험

나가며

■ 강사 이력

1960년대 초 일본에서 복송,

북한에서 김책공대 졸업.

과학원, 번역출판사, 무역회사 등 근무

2003 일본국적 재취득 재정착

2005 통일관련 프리랜서 활동

2006~현재 통일미래 교육사업 활동

민주시민교육 시선으로 본 북주민 및 북한사회의 전환적 문제점들 — 개별적 경험에 토대하여 —

☐ 들어가며

- 1 북주민은 어떤 “사회정치교육”을 받아 왔을까
- 2 개별적 전환속에 있는 이탈주민에게 비친 남한사회상 및 남북주민의 초대면
- 3 개방/시장경제를 마중하는 북주민에 대한 사회문화적 교육 경험

☐ 나가며

들어가며

최근 한국에는 다음과 같은 <통독교훈>이 유행되고 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며 준비없는 통일은 재앙이다.¹⁾” 그러한 연장 위에서인지 하여간 현재는 “통일”보다 이른바 “통일기반”이 각광을 띠고 있다.

이 통독교훈의 가치의 하나는, “주민생활과 사회문화적 통일”이라는 전환적 존재의 모습을 각인해 준 것이다. 다시말하면, 그 사전(事前) 및 과정(過程)에는 시대조류적 기운(氣運)으로 열기 띠었던 ‘통일의 전환 에너지’가 베를린 장벽해체 이후 사회일부에 ‘대체적 역전환 에너지’로 떠돌게 된 독일 현실을 전달하여 준 것이다. 그러면 시선을 남북관계로 돌려, “통일기반” 구축 혹은 “남북신뢰 과정”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한반도에 분단 3.5세대가 등장하게 될 동안 줄곧 이어진 “통일”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통일”개념은 분단시대의 제1세대적 관념 일색, 이데올로기적 색채만 띠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제2세대 이후에게는 그냥 퇴색방지 “동원”의 유산으로 전수되어 오는 것 같다. 세대교체가 일어나 그 통일기반 구축의 통일개념이 제2세대도 키나 잡고 제3세대가 본격적으로 노 저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한반도의 이데올로기적 및 정치적 단색통일에 선행 통독교훈은 “주민생활과 사회문화적 통일”이라는 경험적 스펙트르를 분광하여 주고 있다.

그 교훈의 또다른 가치는, **한독간 사회역사적 차이에 대한 비교성찰로 얻어질 것이다.**

1) 독일 Halle대학교 사회과학연구센터 소장 Everhard Haltmann교수의 강의 등에서

그 독일 역사의 경우 분단이전, 분단, 통일과정 및 이후 줄곧 민주시민 사회적 전통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시민체감상의 성공적 통일로까지는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다. 상반적으로 한반도 역사의 경우, 분단 이전은 남북이 다 그냥 전근대 사회, 현 분단과정에는 남한이 민주사회 발전 중이나 북한은 전근대 사회에로의 퇴행중이라 볼 수 있어, 앞으로의 어떠한 “통일 과정/이후의 미래”를 내다 볼 능력이나 실력의 부재미약으로 그 논의 자체가 부조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통일”로부터 통일기반”에로의 쟁점 편위를 발생시키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통독교훈으로부터 배우면서, 북주민교육 지속의 경험에 근거하여, 또 북의 민주시민교육 주제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본 발제를 하려고 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북주민은 어떤 “사회정치교육”을 받아 왔을까
- 2 개별적전환속에 있는 이탈주민에게 비친 남한사회상 및 남북주민의 초대면
- 3 개방/시장경제를 마중하는 북주민에 대한 사회문화적 교육 경험

1. 북주민은 어떤 “사회정치교육” 을 받아 왔을까²⁾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사회교육 개념이 있듯이, 이에 대응하게 북한에도 “사회정치교육”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여기서의 논의 주제 상으로는 아마도 비슷이 맞는 듯 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 사회는 굵직한 질적 차이에 따라 다음 세단계로 변화된다.

- 1) 봉건유교 및 식민지적인 전근대적 상태에서 1945년 해방/분단의 동시 38선 이북의 구소련 군정 하에, 북한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지향, 1958년 사회주의 제도수립, ~1966년까지 운영.
- 2) 이후 1967~1994년 기간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사상체제 확립의 수령체제” 운영.
- 3)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선군혁명체제”로 사회체제가 변화, 운영.

북한사회는, 그 각 시대에 맞게 주민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정치교육”을 해왔고 소여시대 인간전형들을 배출(培出)하였다.

2) 목차구성상 “2 개별적 전환 속에 사는 이탈주민에게 비친 남한 사회상 및 남북주민의 초대면, 3 개방/시장경제를 마중하는 북주민에 대한 사회문화적 교육 경험”

1-1. “공산주의도덕 교양” 시대(~1966년) 및 배출된 “인간전형”의 특징

1-1-1 “사회정치교육”

이 시대의 “사회정치교육”의 목적은, 시급히 사회의 균열을 진정시키고 대립을 완화시키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사회를 벗어 날 사회적 준비는커녕 근대 사회발전의 초입에도 이르지 못했던 북한사회에서 외세와 그를 후견으로 삼은 정치가 사회에 강요한 계급투쟁, 사회혁명, 동족상쟁 및 정파(政派)투쟁에 의한 피해가 극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측되었지만, 그 교육원리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지향이라는 사정 범위에 제도상 기계적으로 한정되었다. 또 낙후한 사회경제적 제약조건으로 하여, 교육대상 유형도 엘리트 교육을 받을 신분상 특권층인 권력상층을 한편으로 한 그 나머지로 광범한 중하층이라는 단순 이분법에 국한되어 있었다. 청소년 부류 등에 대하여서는 거의 무관심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 교육목표도 “공산주의인간의 전형”이라고 하는 모델창출이었다.

이 시기 “사회정치교육”의 사회현실적 결과는 따라서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하였다. 물론 항시적 반일반미 감정에 뿌리 둔 사회심리 기반의 사회혁명성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으나, 반면 기독교적 서양형으로 볼 수 있는 “화목과 평등”사상도 대조적으로 매우 넓은 기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 동양 유교적 유형으로서, 한편으로 “우리는 친형제, 온나라 한가정” 및 “아버이” 같은 의리형 집단주의가 움트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계몽기에 서구문명을 받아들여려던 **실학사상**도 사회조류의 한 가지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

사 례

1967년까지 북한에서는 **실학전통 계승**을 주장하는 강력한 정치적 분파가 존재하였다. 또 모든 학교 복도 등에는 실학자들의 초상화들이 주련히 걸려 있었다. “고려통사”, “목민심서”와 “동의보감” 등이 출판보급, 평양대극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극이, 인형극장에서는 “콩쥐팍쥐”, “서대귀전” 등이 상연되고 있었고, 영화관들에서는 “홍부전”, “양반전” 등이 상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고금동서 사회 사상개념들의 혼란 와중(渦中), 그 교집합적 집단주의 가치관

3) 제일 약해 보였던 것이, 지주나 자본가 등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의식**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에로 점차 수렴하여, “천리마 작업반”이라는 하나의 대중동원 사상과 그 운동으로 전사회적 공명이 일어났고, 새로운 사회정치적 이행 즉 또 하나의 **사회적 전환의 준비**로 되었다.

사 례

계급모순을 동력으로 하고 일어나 이천만 아사자를 발생시킨 마오중공 “대약진” 운동을 정치적으로 본받아, 북한에 도입된 “**대고조**” 운동이 일어나자 중앙의 계급투쟁과는 반대로, 전국적으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전사회적 화목과 평등을 지향하는 대중동원운동으로 전개 되어 나갔다.

1-1-2 “공산주의인간의 전형”

“815해방” 구소련군정과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625전쟁, 사회주의 혁명 등 15년간 지속적인 계급투쟁/혁명의 연속과정을 통하여 “평등과 화목을 지향하는 무산자 대중”으로 전략된 주민들은 이문화(移文化)적 계급투쟁을 경험, 자기인간성 변질 체험하고 또 일정하게 삶의 재반성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이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이라고 내세워진 사회경제적 단일 목표로 집초, 처음에는 개인동기형의 “천리마기수” 지향, 이어서 집단동원형의 “천리마작업반 구성” 지향으로 강력히 추동되어 나갔다.

이 동원으로, 중하층 대중 속에 “공산주의 전형”들이 대량 발현되었다. 대중은 단지 “공산주의도덕 교양”과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과의 투쟁(반종파투쟁)”을 통해서만 권력상층을 보고 알았을 뿐 그 외는 알지도 못 하였다.

사 례

- “독로강반에 핀 꽃”이라는 실화(실화의 주인공 김수복 인민교원) 및 그것을 영화로 형상한 예술영화(주인공 성혜림)에서는, 견지 못하는 장애인 아동을 담임교원이 몸소 수년간 업고 등교, 공부 가르친 사실
-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도 같은 반에 있는 장애아 친구를 7년간 매일 같이 업고 등하교한 사실(소년영예상 수상자)

그 주요특징의 한 가지는, 북한식으로 “공산주의인간의 전형”으로 불리우거나 그들을 동경하는 주민의 공산주의 개념에 대한 생활적 감정과 관념이다. 당시뿐 아니라 이후 전

기간에도, 북한의 대중사회에서는, “공산주의”라는 외래어 의미가 거의나 “공짜” 혹은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식으로, 사회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 및 경제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 소통되고 있었다.⁴⁾

주요특징의 다른 한 가지는, 전반적 “평등과 화목을 지향하는 무산자 대중”속에 출현한 사회적 우수분자인 “공산주의인간의 전형”에게 사회적 정당성이 부여된 **타인의 사생활 혹은 프라이버시 영역 진입 방도**가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도래할 차기 사회단계의 진행 방향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다.

모든 교육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그 내용이나 방법 등은 배우는 사람과 그 사회의 준비 정도에 적합해야 한다. 유럽에 기원을 둔 계급투쟁적인 “공산주의 교양”이 동양 유교 사회 수준에 있던 북한 사회에 적용되기는 너무나 이른 것 같았다.

1-2. “충실성 교육” 시대(1967~1994)와 “주체시대의 인간 전형”

1-2-1 “사회정치교육”

1967년 체제전환이 재가동된 북한에서는, 이후 “사회정치교육”이 전반적으로 주체사상~충실성 교육으로 재편성 되었다. 아무리 공산주의 교육을 해 보아도, (서양형의) 이데올로기적 혹은 계급투쟁적 기풍이 전 사회에 만연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사실상 동양 유교적 색채가 짙어 적성(適性)적인 이 충실성 교육은 오히려 그 도래가 예견된 “사회정치교육”인지도 몰랐다.

아무튼, 공산주의 교육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 유교적 색채를 띤 충실성 교육이 급속도로 전 사회를 염색시켜 나갔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골자로 하는 주체사상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여기서 생략한다)

공산주의와 같은 서양 이데올로기와도 달라, 충실성은 그 교육 목적과 목표가 보다 단순명백하고 호소성도 강했다. 충실성 교육은, 각자의 “정치적 생명”으로 불리우는 “수령의 정치적 신임”이라는 정치도덕적 자극(인센티브)을 획득하기 위한 주민과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생활 과정이 학교 및 사회교육기구(조직생활)의 정연한 제도적 공간 속에서 경쟁(일명 “충성경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물론이거니와 이 충실성 교육의 필요성은, 수령의 의도에 따른 “**사회의 구성과 운영**”

4) 1997년 지시되어 나온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없애라” 조치 참고. 97년 당시 이 지시와 함께 “경제부문에서 실리주의 방침”, “‘러시아풍 없애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다. 따라서 "사회정치교육"의 원리는, 주민과 청소년의 혁명과 건설에서 발양하는 노동동원 성과가 그 최종적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사회정치교육" 과정은, 법적성격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강력한 "법적형태"를 띠고 진행되는 매우 엄격한 교화과정이다. 계급투쟁의 변종인 사상투쟁 전담기구로서 "조직생활평정" 및 "보위부"라고 불리우는 사상교양과 사상단련의 각 분담 사회정치 기구들의 조직책임으로 관리운영 되었다. 또한 적용되는 처벌방식으로써, "생활총화"와 "사상검토"라는 비판~심문 형식과 "노동단련" 및 "노동개조"라는 강제동원과 강제수용(收容)도 사용 되었다.

조직집단적인 "사회정치교육"으로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인의 사적영역 소멸과 함께 국가형 **동원시스템 사회**가 (이론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왜냐면, 조직운영 기제로서의 "유일사상체계(시스템)"에 따라서만 각자의 모든 해석과 분석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령을 수뇌로 하는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소속되어야만 현실적 삶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 례

- 전 당과 전 사회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수정⁵⁾, 재접수토의, 전 당과 전 사회에 정규적이고 정기적인 조직생활체계(시스템)가 신속한 구축되었다.
- 각급당조직 책임자들이 생활평정권(~정치적신임권) 장악으로 혁명화 처벌권을 독점, 행정과 기술마저 좌우지하는 직접적 독재자들로 전락되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설에 근거)
- 그 정치조직 책임자들은, 개인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와 정치조직생활 총화의 정당화으로써 전 사회를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의 침해장"으로 전변시켰다. 이리하여 "공산주의 교육" 시대에는 이데올로기 대립도 계급투쟁도 다 미미하던 북한 사회에 이제는 "사상투쟁⁶⁾"의 명분으로 <정치도덕적 투쟁>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물질기술적 자극에 비한 정치도덕적 자극 강조에 근거)
- 정치교양기구인 당 생활 평정과 병설된 정치공안기구인 보위부망이 주민생활의 일거수 일투족 감시미행 및 체포(말반동) 등으로 사회는 불신불안과 공포로 운영 되었다.(계급노선과 군중노선에 따른 계급적 안목형, 그리고 반면교사법 통치술=시범게임 정치행사)

5) 2012년 12월 "당의 유일적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이 새로 나왔다. 유사한 "10대원칙"이지만 그 성격을 펴그나

6) 사상투쟁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식 정풍운동이나 북한식의 정치도덕적 운동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중하다.

1-2-2 “주체형의 인간 전형” 배출과 그 특징

“수령에게 충실한 혁명전사(일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보위”하거나 “수령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린” 사람들, “숨은영웅”, “숨은공로자” 등등 이 시대에 배출되었다.

사 례

- 간부와 주민에 대한 김일성의 상투적 교시조차 “주인다운 기풍 세우라”와 “허위보고 없애라”였다. 80년대 권력상층부로부터 시작된 불법 외화벌이 활동 진출과 배급주의 경향으로 사회는 급격히 타락하였다.
- 북주민들이 가졌던 생산동원적 가치관은 70년대를 통과하면서 소비향수적 가치관으로 변질되었다. 상업대학, 영화대학, 사교대 등 입학경쟁률이 공농과 대학의 수십배로 치솟았다.
- 숨은영웅 박영철, 백설희 및 숨은공로자 홍기복 등에 의한 전사회적 대형낭비 발생.
- 특히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일순위 대상으로 된 인테리들은 사회적 위축. “혁명가” 칭호 부여로 지적재산권 등이 결손당한 교원들 상대적공핍화, 이로서 새세대 인테리 부패 심각화
- 농촌동원, 무리배치, 집단진출 및 외화벌이 등 학생동원/사회동원이 만연
- 간부들이 제집짓기 등 부정축재 경향이 새로 발생
- 70년대부터 지하경제 장마당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하에서의 뇌물풍조가 만연.

그 전형의 주요한 특징 첫째는 유일사상체계 운영으로 말미암아 인문사회학에 대한 북한의 전 국민적 <지식공백>, 둘째는 사상투쟁적 분위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청의 입추여지(立錐餘地)도 없는 <대화승벽>, 셋째는 공익사업/공동행동 등에서 <반사회성 알려지>, 넷째 (제로 포인트⁷⁾) 등 단련형 고통의 남용과 관련하여 <창의성 결손증>을 가지게 된 것 등이다.

현대적 전근대하이라고도 볼 북한의 당대 전형들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한다.

1-3. 선군혁명시대(1995~현재)의 “사회정치교육”과 시대의 전형

1-3-1 “사회정치교육”

선군혁명은, 북한이 전 세계적 냉전해소와 동서화해 및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이라는

7) Zero Point(원점)~ 원점은 자기희생; 생활적, 사회적, 학술적 등 새출발; 혹은 팀웍에서 자기역할 차지 등 협동능력; 무한대에 도전하기 위한 역발상력 등 창의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 반면 창의적 가치 행위가 다 그러하듯, 기존의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자신의 용기와 노력 등이 필요되는 고난도업이기도 한다.

추세로부터 고립한 결과 자초된 사회파탄~사회붕괴 상황에 대한 위기대책으로서 군사독재 체제에로의 **사회전환**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전환 과정에 북한은, 전 사회적 파탄 속에 학교와 (사상투쟁을 위한 조직생활형) 사회교육 제도도 거의 다 상실, 오로지 군사력에 의거한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이하 ‘비사투쟁’)”으로써 비상경계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 구태여 “사회정치교육”의 “심각한” 변화를 찾아본다면, 첫째로 북한의 모든 **가정과 생활풍습**의 변질과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제도화 수준이 가장 낮고) 전근대적인 **장마당 의존생활** 방식이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더욱이 변질, 변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애한다.

1-3-2 선군혁명시대 인간전형과 그 특징

파탄에 이르는 모든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도, **강탈**이나 **약탈**이 사람들의 아무 거리낌 없는 생계방식으로 되고 **패륜패덕** 만연이 전형적이라는 점이다. 북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전형을 “여우와 승냥이(여와승)”라고 부르고 있었다.

무책임한 군사정권은, 오히려 이 파탄상을 기회 삼아 장마당을 통한 부정축재를 위해 상업을 전개, 시장경제에로의 경제개혁은커녕 장마당의 제도적 정비조차 외면하였다. 이 과정에 **불법배출된 부자와 돈주**들이 시대의 전형으로 되고, 이것이 악순환 고리를 이루어 비사투쟁, 선군혁명의 영속(永續)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사회에 상대적 안정기미가 회복되는 듯 하나, 그 상황개선의 뚜렷한 제도적 조짐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2 개별적 전환을 겪는 이탈주민에게 비친 남한사회상 및 남북주민 초대면

2에서는 남한에 온 이탈주민의 삶을 통하여, 민주시민 교육 시선에 보여질 수 있는 북주민 및 북한사회의 전환적 문제들에 대한 시사(8)를 얻고자 한다).

8) 대조적으로 3에서는, 해외여행을 나온 북한 주민의 삶을 통하여 그 전환적 문제점들에 대한 시사(8)를 얻고자 할 것이다

2-1 개별적 전환의 삶

“대량탈북시대”도 이제 15년의 연륜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탈북자나 이탈주민은 접경 지역에 살든 혹은 한국이나 제3국에 살든 이른바 “전환”속에 있다. 그들은 “개별적 전환”의 삶을 산다. 왜냐면 그들은 북한에서는 그 지식조차 없었던 낯선 사회화 체험 중에 있으며, 또 그들이 개별적으로 떠나온 북한과 도착한 남한 사이에는 아직 그 어떤 형태의 민족적 통일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북주민이 사는 북한사회에서는 70년 가까운 기간에 사회주의혁명, 3대혁명 및 선군혁명이라는 3가지 “체제내 전환”들도 경과되었지만, 그것과 탈북자들이 나와서 겪는 이 개별적 전환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2-2 비쳐진 남한 사회상

모든 이탈주민에게 비쳐진 남한사회상의 典型적 특징은, 오히려 1) 고학력성, 2) 근면성, 3) 유행민감성 및 4) 어르신 문화 등이다. 그래도 민주시민 사회로 비쳐진 체감적 모습을 찾아 본다면, 북한에서도 선전으로 늘 듣고 있었던 시위, 파업, 농성 등이다.

사 례

- 정착지원법에 따른 생활보장을 받고 살던 어느 한 주민은, 자가용차의 마련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그 혜택이 끊기자 국회의사당까지 올라가 항의하였다고 한다.

남한사회의 민주주의적 단면들이 있는 그대로 읽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을, “개인”, “자유지”, “개인소유”라는 개념이 원리적으로 설 자리가 없는 유교문화 및 집단주의적인 북한 조직생활 사회에 3대를 이어 장기간 형성된 (인문사회적) “지식공백”, (사상투쟁으로 굳어진) “대화승벽” 등 각종 내면적 작용들로 납득할 수 밖에 없다.

사 례

- 각 사회적 행동의 동기에 시민적권리나 사회질서를 기반한 자율성보다는 전통적인 “의리”, “체면” 혹은 “감동” 등이 우세하다. 말하자면 특성화된 인문사회 지식공백으로 하여 그들은 구체적 생활 상황들에서 지적(知的)대응보다는 관습화된 “도덕의리적” 대응패턴에 따르어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감정 통제가 미약하고 매너관리도 잘 안되어, 쉽게 위협적 혹은 배타적 태도에 빠져 들기 쉽다.

- 특유의 “대화승벽” 으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등 경우 상대방 경청에 커다란 곤란을 느낀다. 특히 고정된 감정적 경계심에 의한 소통 장애, 문맥 단절에 의한 의미전수 장애가 크다.

또한 정치적 유일사상, 유일령도; 사회적 평등, 무상치료, 무료교육; 경제적 집단소유, 전민배급, 후방공급제 등에 대한 향수가 있는⁹⁾ 그들에게, 북한과 180도 다르게 자기판단, 자기선택, 자기책임, 실력경쟁, 준법성 등이 지배적인 남한사회 세부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 례

- 分掌이나 分業이 미숙하여 협동성이 나빠며, 월권행위나 직무유기 등에 대한 自制力이 부족하다.

2-3 초대면

원래 북주민에게는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삶, 수령이 준 정치적 생명을 빛내는 삶”이라는 인생관이 구체적으로 치밀화 조직생활적 사회관행이 습관적으로 깊이 체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관계방식이 “힘있는” 간부중심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위주로 깊숙히 몸에 배어 있다. 사회화에서 달성할 “수준” 혹은 “능력”에 대한 개별적 지표가 이같은 “정치도덕성 잣대” 하나로만 정리되어 있다.

게다가 북이탈주민도 남한으로의 이주민이지만, 그들은 정착지원법에 후원되는 “특수이주민”이다. 역사에 드문 이 “정착지원”이, 이탈주민에게는 “정착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착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다. 사회적인 신용불량 개념에 관한 둔감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사 례

대량탈북 15년, 2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남한의 학계, 조사기관 및 이탈주민단체 등의 협력으로 이른바 수리통계모형 “정착인덱스”가 시작/가동되었는데, 그 출력자료 “이탈주민의 정착도” 값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비현실적 수치가 나와 당사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일이 있었다. 원인분석에 참여해 보면, 그 제작에 협동한 이탈주민들이 객관적 자세보다는 역시 도덕의리적 태도로 임하였다는 문화적 요인이 한 가지 주요원인이었다고 보였다.

그 특유의 이른바 “정치도덕적 품성”이나 “사상의리적 태도”로 말미암아 각종 무책임

9) 적어도 2009년 화폐개혁 실시직전까지 북한의 대부분 주민 구성을 이루는 중하층은 소박하게 “배급”의 정상복귀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이후에야 겨우 그 미련을 버렸다.

과 사회적 낭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3 개방/시장경제를 마중하는 북주민에 대한 사회문화적 교육 경험

3-1 도래할 전환 집단에 대하여

북한이탈해 온 2만여명은 체제상 남한식으로 전환되고 또 정착지원이라는 특수조건이 부여된 특성을 가진 “개별적 전환을 겪는 소집단”이라고 본다면 아직 그 기본집단은 통일 이전인 오늘에도 북한에 생활권을 둔 2천만으로서, “도래할 전환”을 대기하는 기본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두 집단은 과거 동일한 북한사회의 3가지 체제 내 전환을 함께 겪었고, 북한이탈주민 소집단의 남한으로 개별적 전환 경우가 설사 좋은 실험적 성과를 거둔다 해도, 이것을 곧 2천만 모집단으로 일반화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한민족은 분단이전에 동일한 사회문화적 상태에 놓였으나 70여년 분단을 경과한 오늘 통일을 향한 전환 문제가 부상되는 것 자체가 그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전환이라는 시점에서 상기 두 집단의 유의한 차는, 그 사회성과 자립성 환경의 두 가지에 기본적으로 환원된다고 본다.

현재 이 기본집단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소규모 및 미래지향적 사회문화 교육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남한 정부는 제도적 특수성 때문에 도래할 전환 집단에 접근하지 못하지만, 종교계나 국제사회는 이미 수년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간단히 소개한다.

3-2 경험

3-2-1 학습 네트워킹

자율성

3-2-2 학습방법

교수주의 아닌 학습자 주체적으로

3-2-3 교육목표

“세계를 보라”에 따른 현실의 체험

합의능력과 협동능력

3-2-4 단기적 교육내용

- 커뮤니케이션
- 경제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그 적응
- 창의성과 사업 기획
- 독서

3-2-5 삶의 향상을 체험하는 자기실천

- 소액자금 운영체험

나가며

역시 통독교훈;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없는 통일은 재앙이다.”

.

질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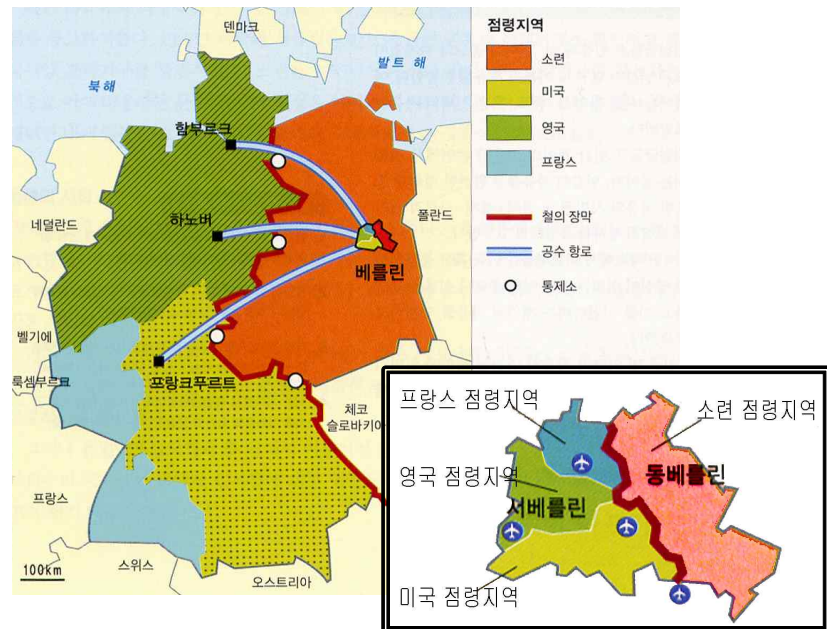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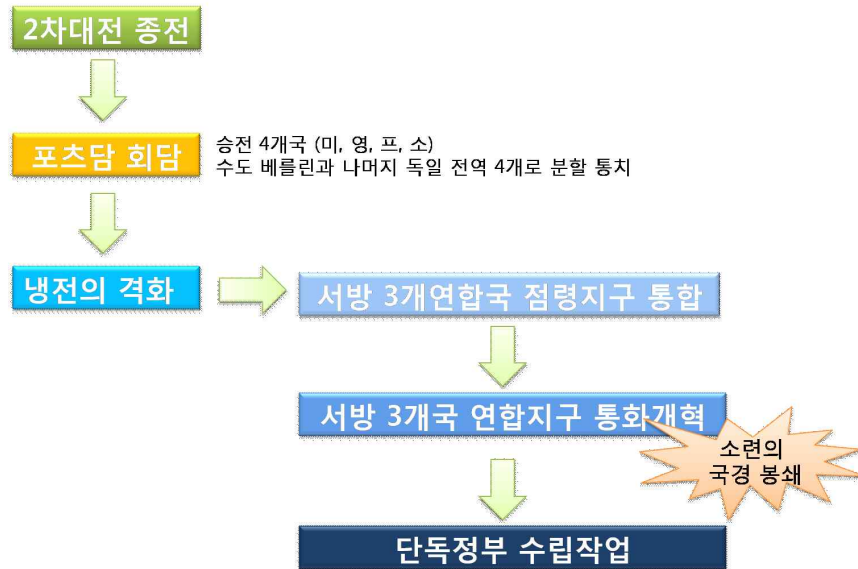
소속 :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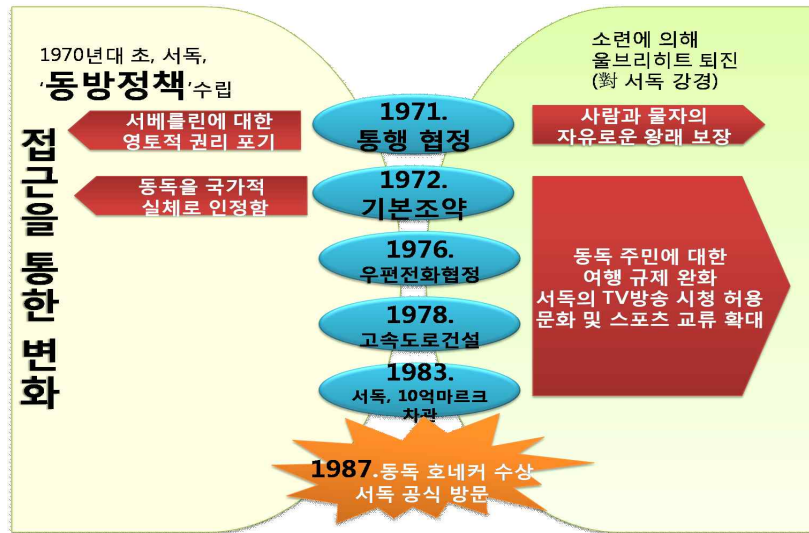
참고자료

동서독 통일의 전개 과정

① 동서분단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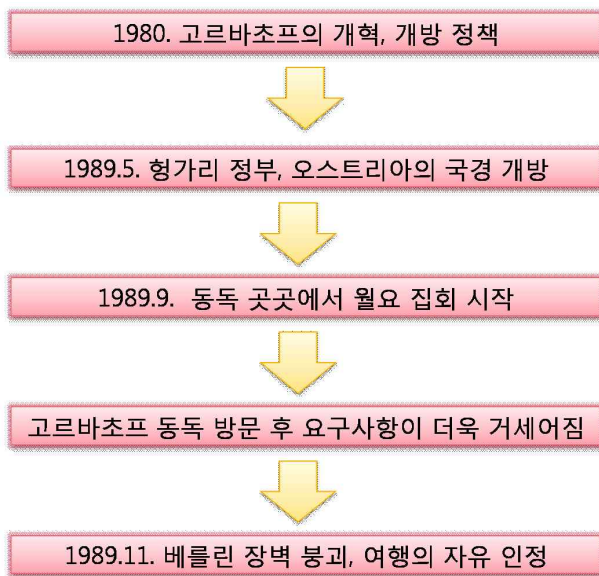


② 동방정책 : 접근을 통한 변화 - 서독의 對 동독 정책



1970년대 서독에서 취한 동방정책의 기본 방침은 '접근을 통한 변화'였다.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정부가 바뀌어도 동방정책의 기초는 변하지 않고 정책의 기본 바탕을 이루었다. 통행협정을 시작으로 많은 협정들이 동-서독 간에 이루어졌는데, 서독의 지원에 따라 동독은 동독 주민에 대한 여행 규제 완화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동방정책의 정점(頂點)은 동독 수상 호네커의 서독 공식 방문이었다.

③ 동독 붕괴의 과정



헝가리의 국경이 개방되면서 동독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헝가리의 수도 부다

페스트, 체코 프라하, 폴란드의 바르샤바의 서독 대사관, 동베를린의 서독 대표부에 모여들어, 탈출을 시도하였다.

1989년 9월 25일 월요일에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시위가 ‘월요평화시위’라는 이름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되었고,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동독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의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결국 당국이 무릎을 꿇었다. 1989년 11월 9일 통행자유화조치가 발표되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후 1990년 3월 동독에서는 총선을 통하여 새 정부를 구성하였고, 투표 인구의 2/3 이 서독과의 신속한 통합을 지지하였다. 이어 1990년 7월에는 경제, 통화(화폐), 사회 통합 협약이 발표되어 서독의 시장경제와 화폐, 사회보장제가 동독에 적용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다섯 개 주(州)가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 후 서독의 각 주마다 동독의 각 주는 1:1 자매결연을 맺어 서독 각 지방정부의 시스템을 동독지역에 이식하였다.

참고자료

1945년 해방 후 북한정치의 전개

(1) 북한 정치의 주요 사건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토지개혁” 실시
1946년 6월	문맹퇴치운동 실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1950년 6월 25일	전쟁
1954년 ~1956년	경제복구 건설
1957년	천리마 운동
1967년	주체사상의 통치이념 정착
1974년	김일성주의화 단계 (부자권력 세습)
1975년 11월	3대혁명 전개 -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1977년 9월	사회주의 교육체제발표
1982년 ~1994년	김정일 권력강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 - 선군정치
2003년	NPT 탈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19일 발표)
2012년 2월	김정일 대원수 추대
2012년 4월	김정은 당1비서 추대
2012년 7월	김정은 공화국 원수 추대
2012년 9월	의무교육기간 1년 연장 (11년제 -> 12년제)

(2) 역대 남북한 합의서 내용 비교

구분	기본 원칙	특징	실천방안	서명 주체
7.4 남북 공동 성명 (1972)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통일 원칙 천명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	이후락 특사(남) 김영주 특사(북)
남북 기본 합의서 (1991)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이행 조치 내용의 명문화	분과별 위원회, 공동 위원회 설치	정원식 총리(남) 연형묵 총리(북)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	자주통일원칙, 통일방안의 공통점 인정, 인도주의적 문제해결, 교류·협력 활성화	구체적 실천 문제 논의	당국간 대화	김대중 대통령(남) 김정일 국방위원장(북)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2007)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 협력,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한반도 평화 증진과 동북 아시아의 공동 번영 추구	상당한 체제에 대한 상호 존중, 대화 강조)	노무현 대통령(남) 김정일 국방위원장(북)

독일의 경험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2013)

